

‘유출’ 아닌 ‘노출’로 책임축소 급급… 결국 소송 역풍

유통공통의 민낯

〈上〉韓 소비자 기만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도 CEO 사과뿐, 피해 보상은 없어 국내 압도적 지배력에 ‘고자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 쿠팡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책임과 사과 대신 처벌과 보상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축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논란이 터진 후 쿠팡은 적극적으로 사과하기보다 잘못을 축소하고 덮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건 후 올린 여러차례 입장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지문에 노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쿠팡은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7일 공고를 ‘유출’로 수정하고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시했다.

쿠팡은 중국인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빼돌린 상황에서 직접적인 유출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

벌을 피하기 위함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록한 쿠팡은 이론상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회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을 관리하기 위한 방어논리로 보이지만 현행 법상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기에 해킹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모두 유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조용해질 때까지 숨기에 급급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 달 30일 박대준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마지막으로 어떤 보도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객센터에선 상황별 응대 가이드를 두고 전체 답변 중 30%가 “조사 중이라 답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가운데 유료 구독을 끊겠다는 고객에겐 현금 보상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통해 책임을 피

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국내 업무를 박 대표에게 맡긴 채 두문불출한 상황이다.

쿠팡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김 의장은 미국 상장 법인을 통해 한국 법인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기이 사직에서는 빠져 있다”며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전문 경영인에게 미루는, 최근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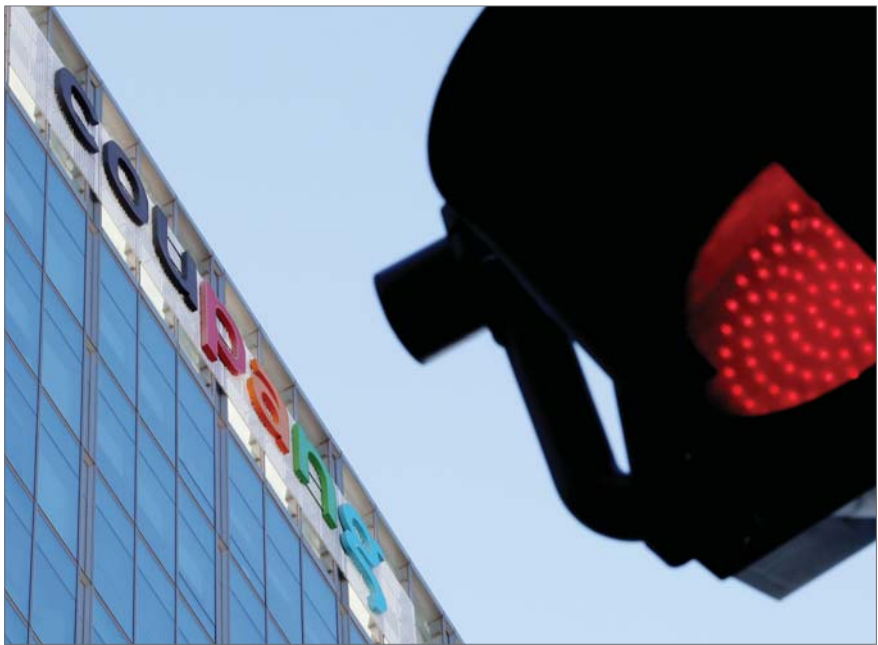
국회·정부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은 올해 국회·정부 출신 대관 인사만 18명을 영입했다.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쿠팡의 책임 회피 자세는 피해 구제 절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박 대표가 고개를 숙였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은 빠져 있다. 쿠팡 측은 지난 7일 밝힌 입장문에서도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피해 보상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처럼 고자세로 나오는 배경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자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과 피해 예방 안내를 재공지한 가운데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쿠팡은 “공지는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통지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라며 “지난달 29일부터 안내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LG엔솔-벤츠 전동화 동맹 누적 협력 20조 돌파 예상

2조 규모 배터리 추가공급 계약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활용 주목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약 2조원 규모의 추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양사 간 전기차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8일 업계에 따르면 LG엔솔은 공시를 통해 오는 2028년 3월부터 2035년 6월까지 북미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벤츠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14억 달러(2조601억원)로, 이는 LG엔솔 지난해 매출의 약 8%에 해당한다. 공급 물량과 단가는 벤츠의 중장기 생산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벤츠의 협력은 최근 2년간 빠르게 확대돼 왔다. 양사는 지난해와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50GWh 규모의 대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미 및 기타 지역에서 50.5GWh, 올해 9월에는 미국 75GWh와 유럽 32GWh 규모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LG엔솔은 정확한 거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해당 계약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규 계약까지 포함하면 누적 협력 금액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계약 물량이

벤츠의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프리미엄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판매량 확대를 위한 대중형 모델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벤츠는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40종 이상의 신형 전기를 출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엔트리급부터 프리미엄급까지 다양한 EV 라인업 확장의 지를 드러냈다.

LG엔솔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원통형 46리치, 중저가·표준형 모델용 중니켈(Mid-Ni) 파우치형 배터리, 그리고 대중적 수요가 높은 LFP 배터리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망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가운데, LG엔솔은 안정적인 고장기적인 공급 능력을 보유한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북미·유럽 지역 생산 설비 확충과 고객별 맞춤형 공급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범위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어 대중형 전기차 확대 전략과 맞물려 향후 LG엔솔과 벤츠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분권·균형발전·자치강화는 국가적 생존 전략”

李대통령 ‘지방시대추 보고회’ 주재 5극3특 전략으로 新 동력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5극3특 국가 균형 전략’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재명표 지방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최근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균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5개의 초광역 경제권(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로 국토를 재편하자는 전략이다.

5극3특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공약에서 발전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자리잡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설계도를 확정된 바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략 발표에서 “이제는 권역별로 전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대통령실, 오늘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 시작… 성탄절께 이전 마무리

/사진 뉴시스

▲민주당,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우려 제기… “위헌 소지” “재판 지연 우려”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윤리위 제소… “맞고소는 후안무치”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변화된 남북관계 국민인식 반영”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오늘 기소… 김과 김일상의

▲한미, ‘비핵화’ 빠진 미국가안보전략에 “정상 팩트시트에 기술”